

농업 ·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장 태 평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1. 농업여건의 어려움

농업이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농업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크게 정리해 보면 그럴 만도 하다. 먼저 농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의 문제를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인구감소기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 인구는 다소 증가되고 있으나 이미 30대부터 20대, 10대순으로 점점 크게 인구가 줄어 들고 있다. 2017년부터는 전체 인구도 감소될 전망이다. 농촌은 이미 본격적인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도시부문에서의 인력수요 때문에 농가 인구는 더욱 빠르게 유출·감소되고 있다.

그동안 농가인구의 감소추세를 살펴보자. 과거 14년 동안에 농가인구는 727만 명에서 2002년에 359만 명으로 반감되었으며, 10년 후인 2013년에는 다시 반으로 줄어 180만 명이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중 고령인구가 대부분이다. 2002년에는 60세 이상 농가경영주가 57%수준인데, 2013년에는 70%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요가 정체되고 있다. 사료 및 가공용을 제외한 순수 식용으로 공급하는 식량이나 신선채소류 등은 현재 거의 자급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편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쌀 소비량을 보면 현재 1인당 80kg수준인 소비량은 과거 추세대로 간다면 10년 후에는 60kg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육류 소비증가도 둔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의 효과도 가세될 것이다. 더구나 개방 확대로 인한 농산물의 수입증가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산 농산물의 수요는 오히려 위축될 것이다.

셋째는 소득문제이다. 실질농업 GDP는 지난 10년간 20조원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같은 이유로 앞으로도 농업소득의 증가는 어려울 전망이다. 농외취업을 통한 농외소득의 증가도 고령화의 진전과 가구원 수 감소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최근에는 농가부

채도 급속하게 증가되었다.

농업과 농가경제는 위기에 서 있다. 이러한 때 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2. 농업정책의 방향

이러한 여건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일반론이기는 하지만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황금분할이 되는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은 어디가 될까?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할 부분은 비용이나 방법에 불구하고 반드시 개입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분야가 그러한 분야가 될 것이다.

첫째, 농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생활여건이 도시보다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도시라는 상품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외의 다른 조건들 때문에 농촌이라는 상품보다 선호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둘째, 안전 농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어야 한다. 개방시대에 우리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소비자에게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농산물을 우리 농업이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친환경농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건강식품의 공급은 물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확산해야 한다. 국토를 가꾸는 것도 농업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넷째, 농가가 소득의 불안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해 및 병충해 그리고 가격하락 등으로 야기되는 농업소득의 불안정성을 감소시켜 주어야 한다.

다섯째, 농업에서도 시장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농업관련 제도를 잘 구축해 주어야 한다. 시장개방에 대비한 시스템과 국제적 기준에 합당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농업정책의 전환

위와 같은 준비가 잘 이루어진다면, 좋은 그릇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정부정책이 잘 수립된다면, 좋은 그릇에 좋은 음식을 담은 격이 될 것이다. 이제 어떤 농업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인가? 정부는 2004년초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10년 장기계획인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농업·농촌종합대책의 핵심과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중추세력으로 쌀 산업은 7만호, 축산업은 2만호의 전업농을 육성할 계획이다. 규모화에 한계가 있는 원예산업은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공동마케팅을 활성화하고, 품목별 생산자를 전국 단위로 조직화하여 소비촉진과 수급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둘째, 매년 35세 미만의 신규 창업농 1천명을 선정하여 이들을 미래 농업에 선도할 젊은 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창업농에게 영농정착자금을 2억원까지 지원하고, 농업인턴십제도 및 창업농후견인제도로 이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존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능력, 사업성을 심사·평가하여 매년 3,500명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하여 2003년 9.4%인 직불제 예산비중을 2013년에는 23%까지로 확대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도 대폭 확대하고 국가재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매년 2천억원의 경영회생자금으로 재해와 가격불안정으로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는 농업인의 조기 회생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생산이력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까지 96개 주요 품목에 대해 GAP 관리지침을 만들고, 생산이력제도 200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축산물은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HACCP제도를 사육에서 판매단계까지 전 과정에 확대 적용하고, 가축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시스템도 초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다섯째,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2013년까지 현재보다 40% 감축한다. 유기질 비료 공급을 늘리고, 천적과 미생물을 활용한 농법확산으로

소비자가 만족하고 국토환경보전에도 기여하는 친환경 농업을 본격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여섯째,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과 생명공학의 활용으로 농업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성장산업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품종 육성, 재배기술 등의 기술 개발과 보급을 강화한다.

일곱째, 농산물의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하여 산지유통센터 등 상품화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3년에는 우리 농산물 수출 50억불을 달성할 계획이다.

여덟째,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 보험료도 2006년에는 50%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 영·유아 보육비와 고교생 학비 지원, 농촌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홉째, ‘농촌마을종합개발’과 ‘농촌관광마을개발’ 등 농촌 지역개발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2013년에는 전 국민의 20%가 농촌에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 잠재력이 높은 194개 소도읍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주변 3~5개 마을을 묶어 권역당 약 70억원을 지원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을 1,000개 지역에 추진할 계획이다.

4. 맺음말

농정에 대한 불신이 높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농정의 성패는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는 농업인들의 손에 달려있다. 요즘 농업인들이 현실의 어려움보다 더욱 좌절하고 있고,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할 역할보다 훨씬 더 의존적이 아닌가 생각한다. 적극적이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앞장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정부도 앞으로 농정 로드맵을 수요자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정책이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꿈을 가진 농업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부, 그 꿈이 실현되도록 도와주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제 정부도 과거와 같은 정책실패와 농정불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상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농업인과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농정이 반드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㉞